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상태라는 지구적 차원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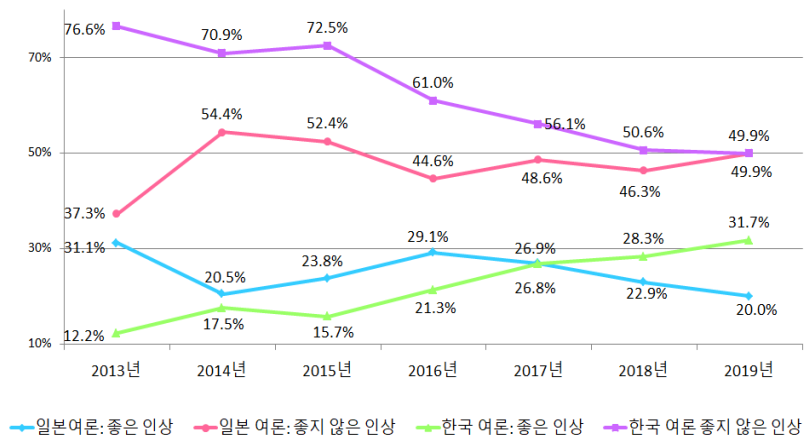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 가. 이 글의 배경
 - 나. 이 글의 목적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 가. 한일갈등의 허방 경직성
 - 나. 정책 전망

1. 문제 제기

가. 이 글의 배경

-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래 악화일로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나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제주 관함식 욱일기 논란, 동해상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 등 여러 사건의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요구 발언, 2013년 아베 총리의 침략 부인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4~15년 고노 담화 재검토, 위안부 해법 갈등과 국제 공공외교전, 2016년 위안부 합의 논란과 부산소녀상 설치, 2017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 “7년 갈등”의 선상에 있음
- 지난 7년간 EAI-켄론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저하는 이러한 장기 갈등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그림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즉,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로 응답한 일본인은 2013년 31.1%에서 20.0%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부정적 인식은 2013년 37.3%에서 2019년 49.9%로 상승하고 있음(손열 외 2019)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식(2013~2019)



나. 이 글의 목적

- 2010년대 한일 양국 간 물리적 이익의 변화 즉, 경제 및 안보이익의 결

정적 괴리가 나타나지 않은 속에서 양자 갈등이 진전된 데에는 양국 정부 간 신뢰의 위기, 특히 감정적 대립이 자리하고 있음

- 이 글은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조장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국내 이념적 지형의 변화에 주목하여, 위기의 구조적 성격, 그리고 본격적 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함
- 양국간 신뢰의 위기는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이란 대외적 배경 하에서 양국의 민족주의 충돌 즉, 일본의 복고 민족주의와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의 충돌로 야기되는 것임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 2010년대 들면서 협력적 안보, 개방적 경제질서, 개인의 자유 신장 등 미국주도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혼란 상황에 빠짐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 1980년대 이래 본격화된 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상품, 자본, 인적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간 불균형 성장, 그리고 국내적·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야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이끌게 되었음
- 특히 2007~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산업국에서는 세계화 진전에 따라 자국이 쇠퇴하고, 불균등 발전의 희생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도덕적 쇠퇴로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문화적으로 (합법, 불법) 이민, 인종적 소수가 기존의 사회적 유대를 해치고 있다는 인식,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됨. 대외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전통적 산업부문, 전통적 산업지역(미국의 경우 러스트벨트)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경제민족주의, 이질적 문화요소로부터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는 자민족우선주의(i.e., 백인우월주의)가 정치적 세를 얻게 됨
- 그 극단적 정치형태로서 포퓰리즘이 등장함. 사회적·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정치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속에서, 기성 정치를 혐오하고 잊혀진 대중의 목소리를 부활하는 반-제도권(establishment) 정치가 부상함 (Judis 2016; Eichengreen 2018)

*양국간 신뢰의
위기는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이란 대외적
배경 하에서
양국의 민족주의
충돌 즉, 일본의
복고 민족주의와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의
충돌로 야기*

패권국은**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강압적 규제 수단을****동원함으로써****자유로운****국제경제질서를 훼손**

- 민족주의의 부활은 포퓰리즘의 횡행과 궤를 같이 하여 자국의 상대적 쇠퇴 추세를 역전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고 민족주의의 색채를 띤. 현재의 쇠퇴 흐름을 바꾸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경향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은 1950년대 미국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며, 러시아 푸틴 역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복고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음. 시진핑 주석에 의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혹은 “중국몽” 역시 영광스런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례이며, 일본 아베 총재가 일본의 재흥(再興), 즉, “Japan is back!”을 외친 것도 이런 차원임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 2010년대 들면서 세계경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규범/규칙의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별히, 국제경제질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부정적 안보/경제 넥서스(negative security-economic nexus)” 혹은 “무역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trade)”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빈번히 나타남
- 민족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강대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은 국가안보전략(2017)에서 “미국의 번영은 국가안보의 문제”라 선언하며 무역정책을 안보적 고려와 경제적 후생 고려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저지 혹은 지연을 위한 대중 무역압력,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조치(Section 232) 등으로 표출하고 있음
- 이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미중 마찰로도 이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도전국(혹은 rising power)이 첨단 기술이전이나 취득 과정에서 패권국(혹은 established power)에 의해 제도화된 규범과 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질서 침해라는 외부효과(order externality)가 발생함. 이 경우 패권국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강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훼손하게 됨. 현재 미국과 중국은 5G,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줄이면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중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제한하기 위해 보호주의 무역수단을 빈번히 이용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왔음

- 질서 교란의 주역은 미국과 중국임. 양국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강대국의 보호주의 자체보다는 영향력/권력의 남용, 무역수단의 기회주의적 활용에 있음. 미국의 TPP 탈퇴와 WTO 분쟁조정기구 무력화, ‘국가안보’ 남용 사례, 중국의 사드보복에서 보듯이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주변국들에 일방주의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음. 과연 강대국의 기존 약속/협정이 지켜질 것인지, 규칙과 규범이 지속적으로 도전받지 않을는지, 이런 과제가 부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명분적으로는 개방과 자유화,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규범/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있음. 미국은 역대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약탈적, 수정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 추구를 공인하고 있음. 중국 역시 최근 개방성, 투명성 등 국제규범에 기초한 일대일로 추진을 약속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통해 보편가치를 담는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고자 함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 선진 산업국으로서 일본은 영광된 과거를 호출하여 자국의 부활을 주창하는 민족주의를 목도하고 있음. 이는 세계화에 따른 상대적 쇠퇴에 대한 불만, 세계화 자체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존의 우익사고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의 자신감 상실은 잘못된 교육에 있는 바, 일본의 근대사가 1945년 패전에 따른 승자의 정의(victor's justice)에 기반하여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왕의 교육을 청산하고 영광된 과거를 복원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음
- 아베의 정체성의 정치란 복고 민족주의에 의한 역사 재해석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충돌함. 왜냐하면 일제의 미화는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중요 요소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한국에게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

*아베의
정체성의 정치는
복고 민족주의에 의한
역사 재해석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충돌*

일본의 경우**역사인식 자체보다는****역사이슈에 대한****한국의 태도와****정책에 대한****부정적 여론이****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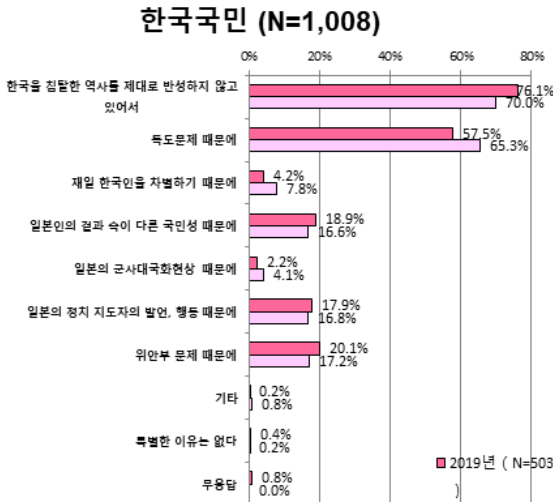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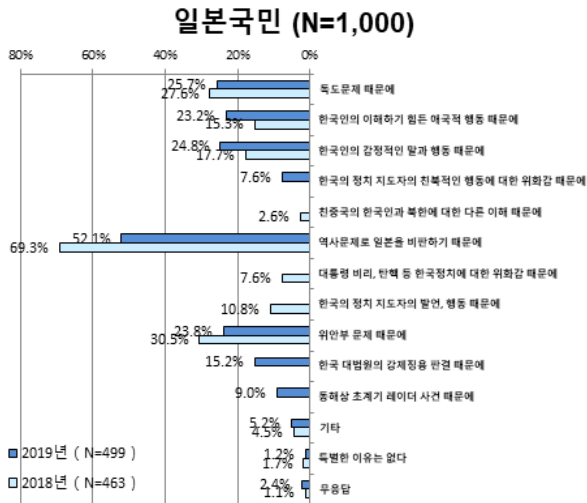
협(ontological insecurity/threat)으로 작용함

- 한국 민족주의는 구한말 저항운동, 을해로 100년 된 3.1운동 등 외세에 의해 존립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자란 저항 민족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음. 문제는 외세의 핍박에 대해 거족적으로 대항하는, 피동적으로 저항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발전을 꾀하는 진진적·건설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하나, 2010년대 한국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복고적 정체성 정치와 조우하면서 저항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당시 조선과 청국과의 연대를 포기하고 아시아를 떠나 홀로 근대화와 서양화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 즉, “我國[일본]은 隣國의 開明을 待하여 共히 亞細亞를 興하기를 猶豫할 수 없다”며 “亞細亞東方의 惡友”를 아세아동방의 악우(惡友)를 떠나겠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선언한 바 있음(“脫亞論,” 『福澤諭吉選集 7卷』). 현재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한국과 거리두기 속에서 자국의 외교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국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 규정함.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부산 소녀상 건립 시도 등이 이어지자 아베 정부는 공세로 전환하여 위와 같은 프레임으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음.
- 일본의 여론 역시 아베의 공세를 지지함.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지만, 일본의 경우 역사인식 자체보다는 역사 이슈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24.8%)’,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23.2%)’ 등을 꼽는 것은 결국 한국인의 행동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는 뜻임

〈그림 2〉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 이러한 여론 추세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하향조정 하고 있음. 2015년 ‘자유,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란 표현을 삭제하고, 안보협력 순위를 강등하며, 2018년 우호국 범주에 한국을 배제함. 지난 1월 28일 고노 타로 일본 외상은 국회 2019년 외교정책 연설에서 일본 외교의 목표로 첫째, 미일동맹을 강화 하고 역지력을 향상하며, 둘째, 우호국 네트워크의 강화 즉, 인도, 호주, EU 등 기본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법치, 기본적 인권, 국제법 존중 등) 및 전략적 이익의 공유 국가와 연대 강화, 셋째, 근린제국(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과의 관계 강화, 넷째,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FOIP) 전략 및 포괄·전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하향조정하고 있음**

**미국의 개입이
악화 추세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과
개선의 동력으로는
작용하기 어렵다**

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을 꼽음.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3년 1월 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두 번째 범주(우호국)에서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 수준의 세 번째 범주로 하향 조정된 것임

- 일본 정부는 Korea passing과 함께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군사력 강화(자강)+미일동맹+QUAD+CPTPP+인도태평양(FOIP)으로 설정하여 한국을 제외해 놓았음. 이런 점에서, 7.1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 간 민족주의 갈등 속에서 국제질서의 약화를 틈탄 아베 정부의 Korea bashing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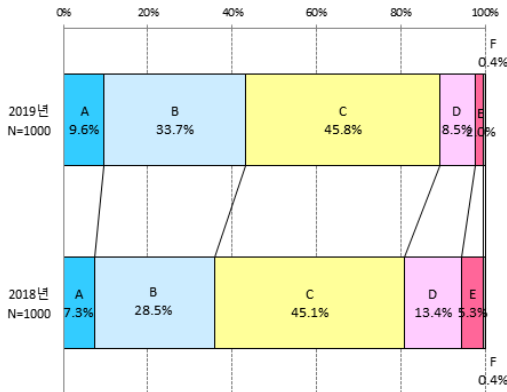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가. 한일갈등의 하방경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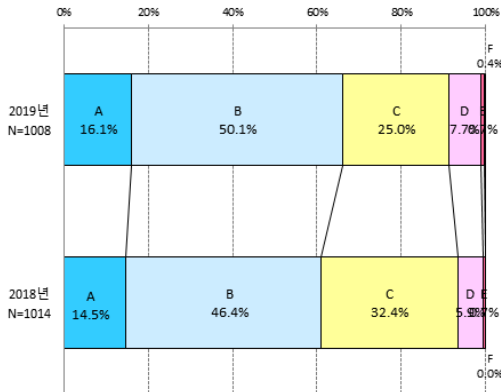
- 한일관계는 상호불신과 보복의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이 충돌이 자유낙하(free fall)로 가지는 않을 것임. 양국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자관계 악화에는 안보 면에서 미국 요인과 경제 면에서 상호의존에 따른 시장 요인이 작동하여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과거 위안부 갈등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고에 의해 2014년 봄 투트랙 접근이 개시되었고, 시장의 경고(무역, 투자, 관광 하락), 중국 요인(중일관계 개선)으로 합의의 길에 이른 바 있음. 현재의 경우도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 요인과 시장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현재와 미래 국제구조의 변화 즉,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한편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을 가져와 일본으로 하여금 ‘무역의 무기화’ 결행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한미일 결속을 추동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함. 미국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6월 1일)에서 드러나듯이 중국견제를 위한 경제, 군사, 외교(파트너십) 3분면에서 미일 결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지난 위안부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개입이 악화 추세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과 개선의 동력으로는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임

- 한 가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유인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임. 앞서 언급한 2019년 6월 발표한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을 찬성하는 한국인은 66.2%이며 일본은 43.3%임(<그림 3>). 또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한국인 응답자는 83.1%인 반면, 일본의 경우 '필요하다'가 43.4%임(<그림 4>). 요컨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비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여론이 크다고 볼 수 있음(손열 2019)

<그림 3>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의견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9.6%	33.7%	45.8%	8.5%	2.0%	0.4%
18년	7.3%	28.5%	45.1%	13.4%	5.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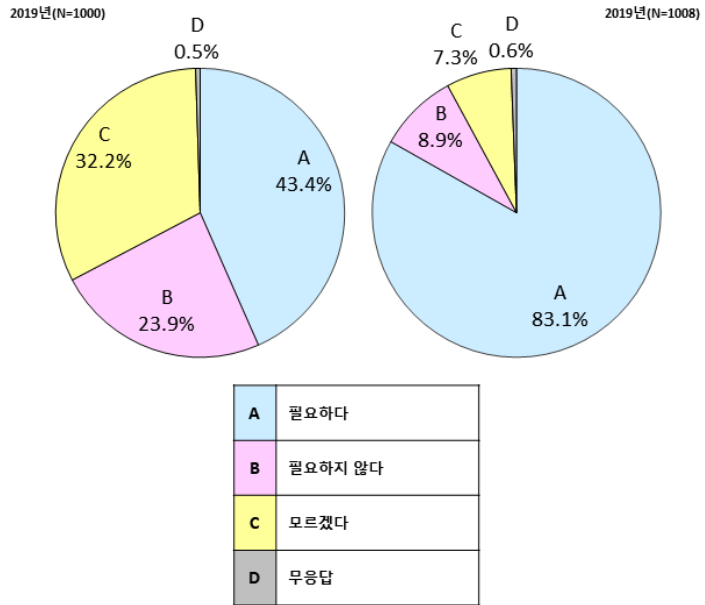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16.1%	50.1%	25.0%	7.7%	0.7%	0.4%
18년	14.5%	46.4%	32.4%	5.9%	0.7%	0.0%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비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여론이 크다

이른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

〈그림 4〉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나. 정책 전망

- 한국과 같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중견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생존과 번영에 사활적 조건임. 특히 미중 양강의 전략경쟁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른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함. 국제 규칙이나 규범 역시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을 때 중견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일본이 정치적 목표를 위한 무역수단 사용 유혹 속에서도 한국에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강대국에 의한 무역의 무기화 우려 때문임. 즉, 세계 경제 3위국 일본도 정경분리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중·미와 달리 명분론에서 자유롭지 못함.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수출규제가 보복이 아니라는 어설픈 주장을 반복하는 까닭은 한국에 대한 중·일의 경제적 영향력 차이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 규칙기반 질서 수호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있음
- 이런 점에서 일본 비판도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맞보복을 자제하고, 스스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일본

을 다루어야 함. 이정환 교수의 글에서 다루었듯이 공공외교 역시 일본 내 여론 주도층인 국제주의 세력을 겨냥하여, 그들의 논리를 활용하는 속에서 수립, 실행해야 함

-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정치의 비극을 피하려면 규칙기반 질서 수호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해야 함. 특히 다자무대에서 like-minded 중견국 연대 노력을 강화해야 함. WTO 수호, 지역제도 강화 등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국제무대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미래 국가 비전 및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함. 향후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의 이중 구도가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면, 다양한 갈등 이슈가 산재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 협력/갈등 구도도 복잡해질 것임. 따라서 한일 갈등이 민족주의나 자주 문제 등 거대전략 담론으로 쉽게 비화되지 않도록 통제(contain)하는 동시에 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수준에서의 지역협력 (혹은 양자 협력) 의제들을 풀어가야 함
- 요컨대, 현재 한일관계의 위기 국면에서는 관계 개선을 향한 대내외적 요청이 증가할 것임. 정부는 대일관계를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인식하는 19세기적 발상, 저항적·방어적 사고를 탈피하여, 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을 협력하며 경쟁해야 할 존재로 인식해야 함

**한일 갈등이
민족주의나
자주 문제 등
거대전략 담론으로
쉽게 비화되지 않도록
통제(contain)하는
동시에 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수준에서의
지역협력 (혹은
양자 협력)
의제들을 풀어가야**

◆ 저자 약력

■ 손 열

現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며 2019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주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with T. J. Pempel, 2018),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with Jan Melissen, 2016)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한유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